

제11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결과보고

□ 회의 개요

- 일시 / 장소 : '22. 9. 1.(목) 16:40 ~ 18:00 / 제주 오리엔탈 호텔(한라홀, 2F)
- 참석 : 총 19명 (18개 시·도 자치경찰위원장, 서울 상임위원 등)

□ 회의 내용

○ 정부 자치경찰제 관련 추진현황

- 자치경찰권 강화,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정식선정(국무회의, 7.26.)
-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(8.2.), 자치경찰지원과 주요 역할 등 소개
- 국무총리 소속 '경찰제도발전위원회' 출범 준비, '22. 9.6. 위촉식 예정
- 정부 '지방시대위원회(안)' 관련 동향
- 행안부 장관 면담 준비(9월 26일(월) 및 9월 28일(수) 중 복수안 제시)
- 대통령령 일부개정(안) 관련 진행상황 공유
 - ▶ '자치경찰정책협의체' 제외, 전국위원장협의회 법적 근거 마련, 서면의결 등 규정
 - ▶ 현재 경찰청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상정 계획 중 (' 22. 9.19. 예정)

○ 자치경찰권 강화 관련 추진방안

- (전북)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의지가 없이 방법만 논의하는 것은 의미없음
- (제주) '정부포상 규정' 및 '위임전결' (위원회심의의결 관련) 등 제도개선 소개
- (경북) '서면의결' 등 문제는 위원회의 규칙제정권으로 해결 가능함
- (부산) 자치경찰을 지원하는 행안부 자치경찰지원과 조직 강화 필요,
교통 범칙금과 관련하여 '자치경찰' 몫 요구

○ 자치경찰사무 예산 편성·집행 방안 개선

- (충북) 예산 편성액(23년) 작년보다 10% 적음, 행안부·기재부 등에 예산확보 건의
- (충남) 자치경찰교부세 마련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므로, 중앙지방협력회의

안전으로 상정되어야 함, 기재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교한 설계, 준비 등 필요

○ 경찰청장 면담('22.9.6.) 관련 건의사항

- (경남) 경찰 휴복직의 경우 긴급히 위원회를 소집하여 상정하기 어려우므로, 위원회에서 사무국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게 조치 필요

○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 지원방안

- (충북) '도시형' 및 '도농복합형' 등으로 나누어 시범실시 후 정책시행 필요

○ 위원회별 제출안건 소개

- (서울) 반려견 순찰대 현황 및 성과
- (부산) 부산형 스마트 교통운영체계 구축
- (충북) 함께해요! 내고향 내부모 사랑애 사업
- (전남) 자치경찰 홍보 콘텐츠 공모전 추진

○ 기타 건의

- (울산) 그간 제안되었던 제도개선방안의 추진상황 및 결과물 정리·공유 필요
- (대전) 사무국 파견경찰관 10명이 현재 6명으로 되어 업무수행 어려움, 행안부 인사혁신처의 입장과 협의회에 대응방안 등 논의 지속 필요
- (서울) 파견경찰관 인력보강 관련 추진경과 등을 다음 회의 안전으로 상정
- (전북) ① 중앙부서 인사이동 등으로 모니터링, 점점이 의미가 없음
② 행안부 건의 시 예산 등 어려운 사안보다 전략적으로 수용가능한 사안 위주 준비 필요, 중앙지방정책회의 안전으로 상정되는 방향으로 하면 수월해질 수 있음
③ 전북청장과 협의하여 경무관 승진할 총경을 위원회에 파견 요청
- (경북) 준비절차 없이 바로 이원화를 실시할 수 있는 제주부터 실시 것을 제안
- (제주) 이원화 전국적 확산을 위해서는 강원, 세종과 같이 실시해야 함
강원, 세종 이원화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법 개정 논의 시 TF에 전국 위원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참여하여 제도개선 방안 함께 논의 필요,
기재부 예산지원 약속도 확실히 받아야 함
- (세종) 이해관계 없는 사안부터 조속히 처리, 세종위원회의 상임화 필요